



## 대우그룹해체와 대노협의 대응방향

송보석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조직부장

### 1. 시작하며

시한폭탄의 위력을 가진 대우사태의 해결 여부에 대우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종착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해결 또한 이외 근

본적인 치유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대우 구조조정 대응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위기 측면을 제거하는 중요한 소명을 갖게 되었다. 발표된 구조조정 방안과 그 동안 대응 경과, 각종 회의와 공청회, 간부수련회(10월 2일)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 2. 구조조정 경과와 방안

대우사태는 지난 7월 19일, 계열사 자산 및 감회장 재산 10조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하에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서 전면이 부상하게 되었다. 김우중 회장은

은 추가로 자동차 경영 정상화 이후 경영 일선 퇴진을 약속했다. 8월 16일, 대우증권이 추가 포함된 19개사와 다수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대우자동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대우통신, (주)대우, 대우중공업 등 6개 회사만 존속시켜 대우자동차,

〈표 1〉대우 구조조정 방안과 워크아웃 추진 계획

업체명	처리방안	존속기업	워크아웃 추진 계획		
			은행	계획수립	추진할 사항
대우자동차 대우자판 쌍용자동차 대우기전 한국자동차 연료시스템	3자 매각 매각 매각	●대우자동차 승용차부문 외자유치, 버스·트럭부문 별도 분리매각 ●대우자동차 판매	서울 서울 조흥	11월 6일 11월 6일 10월 말	매각협상 무관 조기 실사 대우차 처리와 연계 3자매각 추진
(주)대우 경남기업 유화개발	건설, 분리매각 매각 합병	●(주)대우	제일 외환	11월 6일 10월 말	건설·무역 사업분리 계열사간 자금관계 조기 해소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우전자서비스 대우ST반도체설계 대우모터공업 대우정보시스템 한국전기초차	TDX부문매각 매각 매각 매각 매각 매각 매각 매각 매각	●나머지 부문은 존속	제일 한빛 외환 한빛	10월 말 10월 말 10월 말 10월 말	TDX부문 사업분리 채권단 선인수·후정산 인수 12월 말까지 매각 분리후 주식 매각
대우중공업	조선분리 매각	●기계사업부문	산업	10월 말	조선,기계,잔존사업 분리
대우증권 대우캐피탈 대우개발 다이너스클럽 대우창업투자 대우투자자문 아도너스	매각 합병 매각 매각 매각 매각	●대우캐피탈	서울 제일	11월 6일 11월 6일	대우차 처리와 연계 (주)대우, 대우차 처리 연계
25개사		6개사	12개사		

\*워크아웃 관련 노조-대우정밀, 경남금속, 코람프라스틱, 대우건설,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사무, 대우자동차, 대우상용차, 대우자판 노동조합

(주)대우 중심의 전문 그룹으로 재편하겠다는 제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10일 후인 8월 26일에는 대우그룹 계열사 12개사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발표하였다. 또한 10월 4일,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와 합병하지 않고 3자 매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우 워크아웃 조기 추진 발표에서, 워크아웃 대상 7개사에 대해 10월 말, 나머지 5개사는 11월 6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여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대우 구

조조정 방안을 보면, (주)대우와 자동차를 전문 그룹 주력사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계열사의 경우 외자유치와 매각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워크아웃 된 각 계열사를 재건단 6개 은행이 분리·관리하여 연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표1 참조).

### 3. 대응 상황

#### 1) 중앙차원의 대응 결과

대노협은 7월 19일 대우그룹 발표 이

(표2) 공동요구서 요약(결의대회(9/20)시 급급위 제시 자료)

#### ● 기본 입장

1. 대우자금을 해체하고, 개별기업은 제대로 살려야 한다.
2. 경영부실해에 대한 김우중회장·채권단·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김우중회장을 확실하게 퇴진시키고, 소극적(외국)자본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힌다.
3. 합법적인 인권관측·임금삭감 통역서 등 철회,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에 보장을 확실하게 한다.
4.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 ● 공동요구

1.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유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 일방적 고용강요 등로서 요구 중단. - 임금·단체협약 준수. - 합법업체 노동자 포함 생존권 보장
2. 대우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김우중 회장 퇴진, 은닉재산 조사·환수. - 합법행위 관련 경영책임자 처벌. - 정부, 채권단 책임 규명
3. 대우관련 개별기업들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 자산·부채 신속하게 실시후 투명 공개. - 대우금 출자전환 등 부채부담 완화 조치 신속 결정
  - 사채출연, 불필요한 계열사 자산 매각, 해외자산 매각, 위장 계열사 지분매각 우선 처리
  - 김지서 대주주의 지분 소각(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4. 무분별한 해외매각을 철회해야 한다.
  - 대우금 회수에 집착한 매각, 매각을 전제로 한 기업분할, 합병 반대
  - 부채처리·회생/정산방안 강구·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골격으로 처리 요구
5. 구조조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구조조정 계획 투명하게 공개. - 고용·생존권 관련 계획 사전 협의
6.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 소유·지배구조 개혁, 중수 독단경영체제 타파. - 현대, 삼성 등 합법 경영행위 수사와 관련된 인형사상 처벌
  - 노동자 경영참가 장려 확립, 소액주주권리 대폭 강화 등 제도로 개선

후, 정책단 회의(7/30), 대표자회의(8/5)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때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대응기조와 방침을 수립하고 전 대표자들로 '대우관련 비상대책위원회(대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다. 민주노총도 8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우사업장이 여러 연맹에 걸쳐 있고,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결정하고, 허영구 부위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여 급속연맹, 사무금융노련 사무처장, 대우중공업노조, 대우자동차노조, 대우조선노조, 쌍용자동차노조, 오리온전기노조, 대우증권노조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하였고, 집행팀으로 정책, 조직, 선전팀을 꾸려, '민주노총 대우그룹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민주노총 대우 대책위)'를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민주노총과 대노련은 그동안 공청회,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요구안(표2)을 마련하고, 노조참여를 위해 금감위, 채권단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개최해왔다. 또한 기자회견 등 선전홍보에 주력해왔다.

## 2) 단사차원의 대응 경과

단위노조도 비대위의 대응기조와 방침에 기초해서 노동조합별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대노련 소속 워크아웃 사업장 노조 등 12개 노조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활동 중이다. 조합별로 공청회와 간부 교육 등을 개최하

여 노조별 방침과 요구안을 세우는 동시에 현장 조직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총력투쟁 체비를 갖추고 있다.(표3)

## 3) 노조동의서 대응 경과

워크아웃이 결정된 후 금감위와 채권단은 해당 계열사별로 △파업 및 노동쟁의 일체 중지

△인원감축, 인건비 절감 적극 협조 △최소한의 복리비용 감수 △산별연맹, 대노련 등과 관계없이 준수 확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9월 20일 금감위 앞에서 전국의 노조 간부들을 모아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회 이후에는 '대우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① 우리는 고용 및 근로조건 등 생존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동의서는 단호히 거부한다. ② 동의서에 대한 제반 결정은 개별 단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비대위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한다. ③ 비대위에서는 동의서에 대한 입장을 회사, 노조, 금감위, 채권단에 공문으로 보낸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채권단, 금감위, 각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비대위의 이같은 방침이 결정되고 통보된 이후에도 주요 계열사에서는 공작적인 방법을 동원, 사황을 겹고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특히 대우자동차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 12개 계열사의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 노조

의 대응방법도 획일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채권단과 회사의 노조 동의서에 대한 사활을 건 노력은 이같은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동의서 요구에 대한 공동대응은 본격 투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기에 그 성공여부는 향후 공동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태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 하더라도, 결정한 공동대응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공세적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대위는 10월 3일 4차 회의를 열고 '노조 동의서를 단호히 거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책위에서 결정

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 반대 입장과 공동대응 입장을 다시 확인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 4. 예상되는 상황과 공동대응 방향

10월은 구조조정이 사실상 개시되고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워크아웃 사업장의 7개사는 10월 말, 나머지 5개사는 11월 6일에 자산/부채 실사를 종료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고 계열회사와 약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채권 기관

〈표3〉 주요 노조 핵심 요구와 대응

노조	요구와 대응기조	대응상황
대우자동차	-일방적 해외매각 반대(알짜배기 사업장 매각시 수용 불가), -투명성 확보와 노동조합 참여, -부실경영 책임자 추궁, -기술투자 등 비전있는 운영계획 요구	초기-비대위(지역포함), 교육, 홍보 주력 상황방생시 즉각 대응
대우중공업	-매각시 3차교섭(매수, 매도, 노조) 요구, -구조조정계획의 투명한 공개, -부채처리 방안 공개 요구 -고용안정과 생존에 대한 자본 입장 요구, -채권단의 기업개선계획서의 공개	초기-자료수집, 요구안마련, 홍보선전, 공청회 대응-요구전달, 총력투쟁
대우조선	-대우그룹에서 완전 분리하여 독립 경영 -경영권을 담보로한 해외매각 반대 -고용과 근로조건 저하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반대 -경영부실 원인규명과 책임	비대위, 현장조직 정비, 주식매입과 활용, 공청회, 시민대책위 구성, 신문광고 등
대우자판	-현장의 도발행위 대처(임금체불 등) -최고경영진 퇴진 -노조참여(비상경영위원회 구성 요구) -무분별한 해외매각 중단	비대위 구성
대우정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유지 -경영투명성확보와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육성	집행위 비상체계 →쟁대위, 합병(코림, 경남금속, 정밀) 공대위와 공동대응
오리온전기	-신규투자 계획대로 진행 요구 -줄속매각 반대 -경영부실 책임 규명, 노조참여 보장 -경영참여 요구	비대위 구성 10월4~3주간 조합원 교육 10/13 구미지역 연대집회

\* 지면 관계상 모든 노동조합의 상황을 다 실지 못합니다.

내의 이해다툼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계열분리, 분사, 비워크아웃 사업장의 매각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10월4일 발표한 '금융 안정화 대책(부신보유 채권 무제한 매입 대신 구조조정 연기, 금리인하, 대우 구조조정 조기 추진 등)으로 예초에 세운 계획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동의서를 더욱 강도높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계획' 작성을 기점으로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 노조참여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부각될 것이다.

그간에는 투쟁방침 결정, 조직정비 강화에 기반한 단조롭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 10월부터는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조조정 계획의 공개, 계획의 문제점 제기, 노조 참여 보장, 노조 요구 수용, 재벌개혁 등을 적극 제기하면서 대정부·채권단 투쟁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또한 대국민, 대언론 사업과 지역 및 부품업체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조별 순회 간담회 및 투쟁결의대회, 금감위·채권단 항의투쟁, 노조 동의서 요구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11월, 12월은 구조조정 및 대응투쟁이 본격화 되고 이에 따라 투쟁전선이 명확해지는 단계이다. 정부 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감자와 출자전환 등 부채 구조조정,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을 추진하고, 소위 자구노력에 들어가면서 특별 단

9월 20일 대노협 조합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00

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고용 및 근로조건 안정 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고 우리 투쟁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이 치열하게 대두될 것이고, 정부의 결단성 부족, 금융권 혼란의 가시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표류하거나 지연되면서 국회, 언론 등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때부터는 고용 및 생존권 안정,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조합원과 가족, 부품 노동자, 각종 단체가 함께 하는 사활을 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총파업, 대규모 상경투쟁을 배제하지 않는 파격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권역별, 지역별(9개시) 동시다발 집회, 대규모 상경투쟁, 노동시민사회 단체 연대투쟁, 양노총 연대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0년 1월, 2월이 되면 구조조정

성태가 평가를 받고, 상황과 결과에 따라 투쟁이 연장되거나 차원이 다른 새로운 투쟁이 제기되는 단계이다. 또한, 성태 여부에 따라 책임론이 대두, 공적자금 등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구조조정 성공사례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근본 대책을 제시 못하고 수렁에 빠질수도 있다. 또한 이시기부터 메카문제가 본격 등장하고 대

우그룹은 실질적으로 해체일로에 들어가게 된다. 김우중 퇴진, 경영진 책임문제도 부각될 것이다. 워크아웃 관련 투쟁을 계속하면서 매각관련 투쟁이 전면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시기 대응은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차별 투쟁 ▲김우중 회장 경영진 책임 추궁 및 퇴진 투쟁 ▲과상적인 파업, 집회 등 대정부 투쟁 전개 ▲총선대비 대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 등이 될 것이다.

대우그룹 노조 전 간부들은 10월 2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전 경하장에서 간부 수련회를 개최했다. 간부들은 이같은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투쟁 일정에 따라 10월부터는 더욱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 5. 끝내며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 노동조합의 대응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투신

사 문제 부각에 따른 금융대란설 ▲계열사 간 자산 부채의 정확한 내용 ▲손실부담에 대한 이해 대립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 절차와 시기 ▲부품사 자금난과 조업 중단, 영업 위축 ▲계열사 및 사업장 매각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국민경제적 위기(금융위기의 재연) 문제 ▲재벌체제 개혁의 문제 ▲기업구조조정(기업회생)의 문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투쟁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제기하고 투쟁 요구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정책적 측면도 중요하다. 대우 노동자 투쟁은 생존권 문제에서 출발하여 여러 위기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결국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